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66
----------	------

발의연월일 : 2020. 11. 23.

발 의 자 : 박재호 · 이수진 · 강병원
김윤덕 · 오영훈 · 정춘숙
김정호 · 한병도 · 위성곤
허영의원(10인)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여 복잡·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첨단 안전기술 등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대응 역량을 제고 할 수 있음.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있어서도 미래 4차산업 및 IoT를 융합한 신기술 개발 촉진·보급 등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마련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

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관리, 보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재난안전기술 수준의 조사,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재난안전제품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재난안전제품 또는 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체, 공공기관, 재난안전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 및 제20조).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고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촉진·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재난 등을 경감하거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내용·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

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 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을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의 촉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기술 수준 조사
2.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3. 개발된 재난안전기술 평가
4. 재난안전기술의 협력·이전 등 실용화
5. 재난안전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6.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제11조(재난안전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연장을 받은 자는 인증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인증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인증의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인증 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재난안전제품 등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을 생산하기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재난안전기술 또는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 또는 지정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연장을 받은 자는 지정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에게 재난안전기술에 대한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해당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선활용 권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인증된 재난안전제품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구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체, 공공기관, 재난안전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산업체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진흥단지의 구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재난안전산업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재난안전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 개발자에게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5. 재난안전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재난 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포상)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褒賞)할 수 있다.

제22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해제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23조(권한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의 실시
2.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3. 제10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
4. 제11조에 따른 인증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 취소
5.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제15조에 따른 지정 취소
6. 제18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제19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지정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